

능력주의, 체제 정당화, 그리고 정부신뢰*

오하석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한성민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 국문요약 |

본 논문은 '세계가치관조사' 7차 웨이브 자료를 사용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체제정당화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체제 정당화이론에 따르면 시민들이 현재의 체제에 순응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속한 사회체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사회적 원인이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치환한다는 점에서, 체제정당화를 유도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다. 경험적 분석 결과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부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가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가계재정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능력주의를 강하게 믿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였지만 가계재정에 만족하는 이들보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체제 정당화를 유도하며 정부를 신뢰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 체제 정당화, 능력주의, 공정성, 정부신뢰

* 이 연구는 202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제1저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022세계불평등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의 시민들은 전체 부의 76%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의 시민들은 전체 부의 2%만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수준을 비교하더라도 하위 50%는 8.5%만을,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등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Chancel et al. 2021). 즉, 경제 여건은 하위계층에게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공평한 상황을 유지하는 기성 정치체제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현재의 사회 체제가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Jost 2020).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시민들이 불평등한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McCoy and Major 2007).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능력(Merit)을 재능(Intelligence)과 노력(Effort)의 합으로 정의하며(Young 1958), 능력에 따라 시민들이 적합한 지위에 앉고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특히, 능력주의적 가치는 자본주의 논리와 함께 경제적-사회적 성공이 주로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리화했다. 그리고 빈곤과 실패를 개인의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만들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 온전히 개인의 능력 덕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우선, 개인의 재능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다양한 교육기회에 노출되고 소득이 높은 직업과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즉, 성공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비능력주의적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체제 정당화에 기여하는 주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능력주의적 가치는 시민들이 불공정한 기회와 불평등한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능력주의 가치관에 매몰된 시민들은 자신이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체제의 문제나 모순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현 체제를 긍정하고 지금의 불공정한 구조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성정치세력을 신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능력주의 가치관이 과연 체제 정당화를 이끄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현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서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능력주의 가치관이 체제정당화의 기제로 작동한다면 정부신뢰에 미치는 능력주의의 효과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II. 정부와 정치신뢰 결정요인

정치신뢰(Political Trust)는 정치 엘리트, 권위기구, 정치체제 등 정치적 행위자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산출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리키며 (Zmerli and Castillo 2015), 시민들이 정부 및 정치체제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치적 태도를 보여준다. 정치신뢰 중 기존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것은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정부신뢰이다.

정부신뢰와 정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번째는 사회경제적 지위이다. 헤더링턴(Hetherington 1998)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유색인종보다 백인인 경우 정치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특권층들의 경우, 정치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 전반에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경향이 나타났다(Bartels 2008; Verba et al. 1995). 그러나 오늘날의 시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일관된 정책선호를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계급간 사회적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계급의식이 약화되었고(Diamond 2012; Newby 1977), 탈계급적, 탈물질적 가치가 정치영역에 반영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각자의 정치적 선호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Nieuwbeerta 1996).

두 번째 요인은 시민들의 정치적 가치관이다. 정부신뢰 수준의 차이는 개인의 정치적 이념, 그리고 당파성과 큰 연관이 있다(Hetherington and Husser 2012). 보수적인 시민들은 정부지출이 커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보수적인 정부를 지지하고 신뢰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부지출을 늘리려 하는 진보적인 정부는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Jacoby 2000; Rudolph and Evans 2005). 또한, 정치에 대해 관심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Banwart 2007). 하지만 정치적 가치관의 효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특정 정권에 대한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스턴(Easton 1965)은 정부신뢰를 특정 정권이 만들어낸 업적과 성과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특정적 지지(Specific Support)와 자국의 정치 시스템과 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분산된 지지(Diffuse Support)로 구분하였다. 이념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특정적 지지에 편향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념성향에 따라서 이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Jacoby 2000) 정치적 가치관으로 정부에 대한 분산된 지지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정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이슈에 대한 태도가 있다. 맥라렌(McLaren 2010)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유럽사회조사를 분석해서 이민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정치체제, 정치인 그리고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생적인 정책 이슈의 등장 역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보건문제는 정부의 대처능력과 시민들의 정부신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박범섭과 신정섭(2021)은 유권자들이 자국의 코로나 방역이 선진국과 비교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슈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고 해서 이를 기반으로 정치신뢰를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독일과 스웨덴의 해적당의 사례와 같은 유럽의 단일 이슈정당의 일시적인 정치적 성공이다. 이는 지지기반으로 작용한 이슈가 사라질 때,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드는 이슈의 제한적인 영향력을 보여준다.

정치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은 정부의 성과, 특히 경제적 성과이다. 정부의 정당성은 경제성장과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Miller and Listhaug 1999). 정부성과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보상과 처벌 기제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Lewis-Beck and Stegmaier 2000). 예를 들어, 국가의 경제상황이 불황일 경우 시민들의 정치신뢰수준은 하락하였다(Citrin and Green 1986). 그러나 때때로,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성과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Levi and Stoker 2000).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정치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Lawrence 1997). 불평등이 증가하면, 빈자와 부자 모두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진다. 정부가 두 소득 집단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에 두 소득 집단 모두가 정부를 불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Lawrence 1997). 유럽국가의 경우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정치신뢰가 낮아졌으며, 평등한 국가에서는 부유한 시민들이 그렇지 못한 시민들보다 더 큰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Goubin and Hooghe 2020). 하지만 시민들은 정부성과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시민들은 국가경제에 대해 회고적-전망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Hibbs 1987; Kiewiet 1981). 종합하면 시민들은 객관적인 정부 성과만이 아닌, 정부 활동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기대에 기반해서 정부

에 대한 신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정부의 성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기대치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될 수 있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성 인식이 다.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증가로 인해서 공정성은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그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체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공정성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분배적 정의는 사회적 재화가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Cook and Hegtvedt 1983). 다른 한편 절차적 정의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재화가 분배되는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다(Lind and Tyler 1988).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시민들은 정책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시행된다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국가가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며, 소득분배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부, 사법부, 의회 전반을 신뢰하는 경향이 드러났다(Marien and Werner 2019; Schnaudt et al. 2021; You 2005; Zmerli and Castillo 2015). 또한, 자국의 부패가 심각하여 불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할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였다(Linde and Erlingsson 2013; Orren 1997).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에서 본 논문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 중 능력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정성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있지만, 어떠한 요인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없으며 또한, 공정성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I. 능력주의와 체제 정당화

능력주의란 개인이 위계적인 사회체제 내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재화를 분배 받는다는 원칙으로, 영(Young 1958)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은 능력주의 가치관에 따라서 국가 내에서 기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여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Kim and Choi 2017; Lipsey 2014; Martin et al. 2014; Panayotakis 2014). 그 이유는 능력주의에서 강조하는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노력과 재능의 가치’는 시민들이 인식하는 공정의 문제 중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경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성공이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유효한 지표라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개인의 재능에 따라 보상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는 사회 최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Newman et al.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학자들(Lipsey 2014; Martin et al. 2014)은 사회적 지위와 계층,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회의 평등은 개인이 만들어낸 성과에 따라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는 성과 기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고려된다(Petring et al. 2012). 왜냐하면, 출발 조건의 평등이 보장된다면 그 이후에 개인의 순수한 노력과 재능에 따라 소득 및 자원의 차등적 분배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능력주의를 신뢰하는 시민들은 정부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며, 이는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설 I. 능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그렇지 않은 시민보다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이행하는 근대의 사회 합리화 과정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성공의 원인을 개인의 순수한 능력 덕분인 것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정태석 2021). 후자의 의미로 그동안 능력주의는 미국 사회의 ‘아메리카 드림’처럼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다(Jost et al. 2004; Kluegel and Smith. 2017; Mijs 2021). 능력주의는 평등의 원칙보다는 공정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어(Larsen 2016), 시민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높은 믿음이 있을수록 불공정한 평등이 아닌 오히려 공정한 불평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Starmans et al. 2017). 라슨(Larsen, 2016)은 능력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시민들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두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국가의 정책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 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는 사회에서는 재분배 수준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Alesina and Angeletos 2005).

능력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공고화될수록 시민들은 국가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긍정하며, 재분배 정책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다. 이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면 능력주의는 체제 정당화(System Justification)를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체제 정당화 이론은 사회 시스템에 분명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왜 시민들이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Jost 2020).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신념과 외부적 상태가 불일치하는 인지 부조화를 겪을 때 자신의 신념체계를 바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Park and Folkman 1997). 이와 같은 심리학적 통찰을 기반으로 체제 정당화 이론은 시민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을 지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Jost 2020). 시

민들의 체제 정당화 동기는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와는 때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자신이 체제 안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의 체제 정당화 효과는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체제정당화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민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옹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Van der Toorn et al. 2015), 고소득층들보다 저소득층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Jost et al. 2003). 즉,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에 반하는 정치 행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시민들이 현실에 대한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의식’이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정당화하도록 만드는 이데올로기이다(Jost 2020). 고전적인 이론에서 맑스와 엥겔스(Marx and Engels 1845)는 허위의식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이 사회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통제함으로써 하위계급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권력자들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계질서를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부지런함과 유능함이 경제적 불평등을 만들어 낸다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Jost 2020).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계층들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여 체제 정당화의 논리를 받아드리게 된다.

또한 체제 정당화 이론은 ‘외집단 편애(Outgroup Favoritism)’를 이론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외집단 편애란 하위 계층의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상위 계층과 같은 외집단을 선호하면서 시스템을 보존하고 방어하기 위해 오히려 불평등 문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Jost and Van der Toorn 2012). 그렇다면 왜 사회적 약자가 체제 정당화 논리를 받아들여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위 계층을 선호하는가? 이에 대한 원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계급정체성의 약화이다. 산업의 구조 전환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강한 분야(철강산업, 자동차산업)에서 이들의 계급의식이 약한 분야(통신업, 서비

스업)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의 소득향상으로 계급이동의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시민들의 계급정체성이 약화되었다(Diamond 2012; Newby 1977). 두 번째 이유는 계급의식의 자리를 국가정체성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샤요의 연구(Shayo 2009)는 이러한 질문에 중요한 답을 제시한다. 그는 불평등의 증가와 같이 하층 계급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할 때, 하층 계급 입장에서 국가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해서 계급정체성보다는 국가정체성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Shayo 2009). 즉, 사회적 약자들은 불평등으로 인해 자신의 지위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국가자부심이 높아지고, 사회 상위 계층을 선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 복지선호가 낮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Solt 2011)는 점도 약자들이 체제 정당화 논리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계급정체성이 약화된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은 기성사회를 개혁하는 의지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의 경제성장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국가정체성이 강화되면서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체제 정당화를 이끄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적으로 유리한 계층보다 약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본인이 저소득층일지라도 현재의 체제를 공정하다고 믿게 되고(McCoy and Major 2007), 현 체제를 만들어낸 정부를 신뢰할 것이다. 즉 기존 정치 세력의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노력과 공정한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정부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이 결과는 소득이 낮은 시민들이 높은 시민들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가설 II.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능력주의 태도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다.

연관되어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능력주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소득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소득수준이 반드시 개인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재산이 적더라도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축적한 부가 많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시민 역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기존의 체제 유지에 대한 믿음과 기존 질서와 제도를 만드는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이미 현재의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시민들은 추가적으로 능력주의를 통해서 체제를 정당화할 동기부여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상황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시민들보다 능력주의 가치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설명을 정리하면 가설은 아래와 같이 도출될 것이다.

가설 III. 스스로 가계재정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시민들은 만족하는 시민들보다 능력주의 태도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이다.

IV. 분석틀

1. 주요 변수의 개념 및 측정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7차 웨이브 자료를 사용했다. 이 자료는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및 시민들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치 이념, 사회문화적 가치체계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세계가치관조사”의 7차 웨이브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됐으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59개의 국가가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동일한 체제정당화의 논리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체제에 대한 동의가 체제유지에 필수적이며, 시민들은 체제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정치행위를 통해서 체제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의 체제정당화 논리에 대한 수용이 체제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주로 국가권력을 통한 강압적인 권력행사로 체제가 유지되며 시민들의 동의에 의한 체제안정의 효과는 민주주의에 비하면 약하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분류 기준으로는 Polity V(2018)와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사용했다. Polity V가 민주주의로 분류한 국가(총 -10점부터 10점 중 6점 이상)와 민주주의 지수에서 결손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국가, 두 범주에 모두 속한 국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독일,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국, 브라질, 세르비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키프로스, 튀니지, 페루, 필리핀, 그리고 호주 총 24개 국가이며 총 표본은 38,466개이다.

논문의 종속변수는 정부신뢰이다. 정부신뢰는 행정부만을 대상으로(Citrin and Luks 2001), 혹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다(Hetherington 1998). 이 중 정부신뢰를 행정부와 입법부(의회)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대통령제 국가와 의원내각제 국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반을 모두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의사가 반영되는 공간이 입법부와 행정부라는 점에서 두 국가기관의 신뢰 지수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행정부신뢰는 ‘세계가치관조사’의 “Q71 행정부신뢰”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입법부 신뢰는 “Q73 의회신뢰”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두 문항은 1점부터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은 “매우 신뢰한다.”, 4점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이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이를 역코딩하여 4점을 매우 신뢰, 1점을 전혀 신뢰하지 않음으로 변경하였다. 두 변수 사이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0.826이었으며, 피어슨 상관계수는 0.7이었다. 두 변수 사이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두 변수의 평균값으로 정부신뢰 변수 값을 도출하였다.

독립변수인 ‘능력주의’는 ‘세계가치관조사’의 “Q110 성공: 근면(hard work) vs 운(luck)”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의 10점 척도를 역코딩하여 성공배경이 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0의 값을, 성공은 운과 사회적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1로 분류하였다. 능력주의의 요소인 재능과 노력 중에서 노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우선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재능을 측정할 만한 설문이 부재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능은 사회적 배경 등 비능력주의적 요소가 개입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재능은 부모로부터 유전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비능력주의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재능보다 노력을 중심으로 능력주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김태심 2020; Jost et al. 2003; Ledgerwood et al. 2011; Mijis 2021; Newman et al. 2015; Reynolds and Xian 2014). 아래 <표 1>은 위의 선행연구가 능력주의를 어떻게 개념화했는지 보여준다.

<표 1> 능력주의 개념화

논문 저	능력주의 개념화
김태심 2020	“성공하는 데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운이 좋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Jost et al. 2003	(a) ‘Anyone who is willing to work hard has a good chance of succeeding’, (b) ‘If people work hard enough, they can make a good life for themselves’

논문 저	능력주의 개념화
Ledgerwood et al. 2011	Pro-meritocracy conclusion: hard work and determination lead to success Anti-meritocracy conclusion: hard work does not lead to success.
Mijs 2021	“How important you think it is for getting ahead in life...” (a) hard work
Newman et al. 2015	“Meritocracy: Most people who want to get ahead can make it if they’re willing to work hard ”
Reynolds and Xian 2014	“To get ahead in life what is important?” Meritocracy: hard work , ambition, education Non-Meritocracy: Friends and family

‘소득’은 “Q288 가구 소득수준”의 주관적 소득인식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계 가치관조사’는 다양한 국가를 다루기 때문에 각 국가별 통화체계를 고려하기 힘들다는 문제로 객관적인 소득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주관적인 소득인식 문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점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 10점에 가까울수록 고소득층이다¹⁾.

‘가계재정 만족도’는 “Q50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은 피응답자의 가정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며, 10점일수록 만족하고 1점일수록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과 ‘가계재정 만족도’ 사이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0.5, 상관계수는 0.34로 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가계재

1) 주관적 소득은 객관적인 소득수준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차 발생의 문제점이 있다(Donnelly and Pop-Eleches 2018).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소득수준은 논문의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중,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오판하여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텔스(Bartels 2008)는 ‘오인된 자기이해(Misguided Self-Interest)’의 개념을 제시하고, 상당수의 저소득층들이 자신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artels 2008).

정상상태에 만족하는 경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크론바흐 알파 값과 상관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이 낮음에도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시민이 존재하는 반면, 소득이 높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는 시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경우를 각각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기타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뤄진 주요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정치신뢰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Banwart 2007) ‘정치관심’ 변수를 포함하였다. 공정성 문제와 연관되어서 시민들은 자국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할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기 때문에(Orrén 1997),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주민 문제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특정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이념을 추가하였다. 기타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성별, 결혼-동거 여부, 그리고 교육 수준을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국가의 객관적인 경제성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World Bank 데이터를 통해 각국의 명목 GDP의 로그값과 실업률을 포함하였다²⁾. 국가 수준에서 불평등을 통제하기 위해 솔트(Solt 2020)의 가구 가처분 소득 후의 Gini 계수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강건한 통계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조사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며, 고정효과모델의 경우 모든 조사 국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및 기초통계 결과들은 <부록 1>과 <부록 3>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이 사용한 설문문항 원문은 <부록 2>에 첨부하였다.

2. 분석 모델

본 논문의 분석 모델은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이다. 다층모형분석

2) World Bank에는 대만의 GDP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IMF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을 실행한 이유는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가 개인 수준이 국가 수준에 포함되는 위계구조(Standard Hierarchical Structure)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Steenbergen and Jones 2002). 데이터가 위계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개인 간 분산(Variance)과 함께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분산이 존재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자료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면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과소추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층모형을 통해서 개인과 국가 수준의 위계성을 반영한다면 하위 수준의 독립변수의 인과효과가 상위 수준의 독립변수에 의해 조절 혹은 완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teenbergen and Jones 2002). 또한, 개별국가의 특성에 따라, 정부신뢰의 기본적인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수준 변수와 국가 수준 변수를 모두 고려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1 수준 - 개인

$$Y_{ij} = \beta_{0j} + \beta_{1j}(\text{능력주의})_{ij} + \beta_{2j}(\text{소득수준})_{ij} + \beta_{3j}(\text{가계재정 만족도})_{ij} + \beta_{4j}(\text{능력주의})_{ij}(\text{소득수준})_{ij} + \beta_{5j}(\text{능력주의})_{ij}(\text{가계재정 만족도})_{ij} + \beta_{6j}(\text{통제변수})_{ij} + \dots + e_{ij}$$

2 수준 - 국가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로그 GDP})_j + \gamma_{02}(\text{실업률})_j + \gamma_{03}(\text{Gini 계수})_j + \mu_{0j}$$

$$\beta_{qj} = \gamma_{q0}, \quad q=1 \dots 13$$

Y_{ij} : j 국가의 i 번째 응답자의 정부신뢰

β_{0j} : j 국가의 응답자들의 평균 정부신뢰

e_{ij} : 응답자 수준의 오차, 정부신뢰에 대한 응답자 간의 차이

γ_{00} : 전체 국가의 평균 정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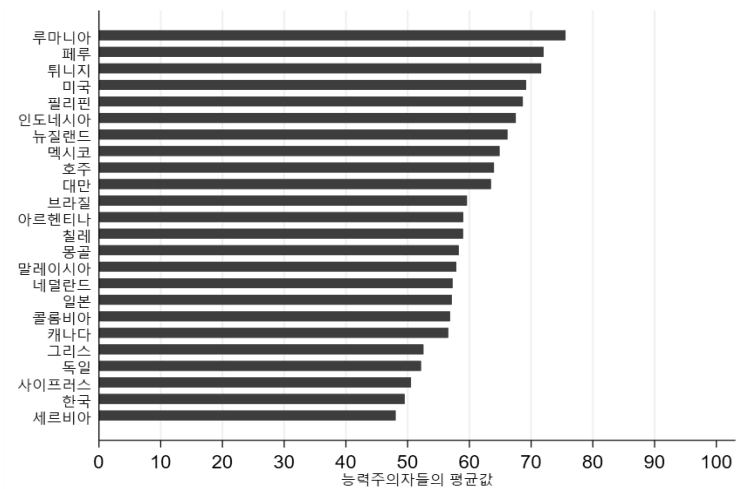
μ_{0j} : 국가수준의 오차, 정부신뢰에 대한 국가 간 차이

β_{1j} : 응답자들의 능력주의 태도가 정부신뢰에 주는 효과

$\beta_{4j} \beta_{5j}$: 응답자들의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과 소득수준, 가계재정 만족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

V. 연구결과

1. 각 국가별 능력주의자들의 평균값



〈그림 1〉 각 국가별 능력주의자 평균값

본격적인 통계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각 국가별로 시민들이 성공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1>은 각 국가별 능력주의자들에게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능력주의’의 변수를 0(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부터 100(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사이로 재코딩하였다. 세르비아와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능력주의자들의 평균값이 과반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능력주의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선별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 원인으로 고려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권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충족시키고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다른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 비해 시민들이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실질적으로 자수성가로 성공한 시민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자기만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의 비중이 1996년에 44.7%에서 2001년에는 58.1%로, 2014년에는 69.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상속부자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Freund and Oliver 2016). 미디어의 발달로 이러한 신규 부자들의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능력주의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능력주의자들의 비중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2014년 기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비율이 약 26%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1>의 결과는 국가 내의 현실과 시민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각 국가별 능력주의자들의 비중이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장에서는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보다 엄밀한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2.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분석결과

〈표 2〉 능력주의와 정부신뢰³⁾

	(모델1) 다층모형	(모델2) 다층모형	(모델3) 다층모형	(모델4) 고정효과 모형	(모델5) 고정효과 모형	(모델6) 고정효과 모형
고정효과						
개인수준						
능력주의	0.0187*** (0.00137)	0.0111*** (0.00143)	0.0378*** (0.00414)	0.0187*** (0.00142)	0.0111*** (0.00148)	0.0378*** (0.00446)
소득수준		-0.00287 (0.00202)	0.0186*** (0.00471)		-0.00282 (0.00210)	0.0186*** (0.00501)
능력주의*소득수 준			-0.00327*** (0.000646)			-0.00326*** (0.000693)
가계재정 만족도		0.0331*** (0.00178)	0.0446*** (0.00408)		0.0331*** (0.00190)	0.0446*** (0.00437)
능력주의*가계재 정 만족도			-0.00177** (0.000564)			-0.00177** (0.000610)
부정부패 인식		-0.0853*** (0.00184)	-0.0851*** (0.00184)		-0.0852*** (0.00205)	-0.0850*** (0.00204)
정치관심		0.0888*** (0.00440)	0.0888*** (0.00439)		0.0887*** (0.00463)	0.0887*** (0.00463)

3) 논문에서 사용하는 정부신뢰지표는 제도로서의 정부 신뢰와 특정 정권에 대한 신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도로서의 정부신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의 당파성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제하고자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2020, 아래 DPI)에서 발표한 정부이념 성향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DPI는 정부의 이념을 1점=우파, 2점=중도, 3점=좌파, 0점=알 수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모델과 결과 값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DPI에서는 대한민국,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일본 그리고 칠레에 대한 정부이념 데이터를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세르비아는 조사대상 국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추가할 경우, 위의 국가들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이념 변수를 제외한 모델을 메인모델로 분석한다. DPI의 정부이념 분류와 결과 값은 <부록 4>와 <부록 5>에 첨부하였다.

이주민 문제	-0.0205*** (0.00358)	-0.0199*** (0.00357)		-0.0206*** (0.00373)	-0.0200*** (0.00373)	
보수	0.0146*** (0.00167)	0.0145*** (0.00167)		0.0146*** (0.00180)	0.0145*** (0.00180)	
여성	0.0329*** (0.00767)	0.0325*** (0.00766)		0.0328*** (0.00769)	0.0324*** (0.00769)	
연령대	0.0108*** (0.00256)	0.0109*** (0.00255)		0.0109*** (0.00257)	0.0110*** (0.00257)	
결혼-동거	0.0148 (0.00817)	0.0142 (0.00817)		0.0147 (0.00816)	0.0141 (0.00815)	
대학이상	-0.0147 (0.00925)	-0.0142 (0.00924)		-0.0147 (0.00920)	-0.0142 (0.00919)	
국가수준						
로그 GDP	-0.000703 (0.0383)	-0.000446 (0.0383)		0.00902* (0.00437)	-0.145*** (0.0152)	
실업률	-0.0326* (0.0161)	-0.0327* (0.0161)		-0.0117*** (0.00173)	-0.0935*** (0.00410)	
Gini 계수	0.00620 (0.0101)	0.00603 (0.0101)		-0.00882*** (0.00149)	0.00433** (0.00165)	
상수	1.761*** (0.176)	2.244 (1.203)	2.069 (1.201)	1.878*** (0.0248)	8.79*** (0.749)	8.67*** (0.749)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	0.497 (0.004)	0.446 (0.004)	0.446 (0.004)			
국가수준 분산	0.123 (0.355)	0.068 (0.019)	0.068 (0.019)			
Prob > chi2	0.00	0.00	0.00			
로그우도값	-39314.872	-31956.738	-31931.377			
개인수준 관측값	36,710	31,403	31,403	36,710	31,403	31,403
집단수준 관측값	24	24	24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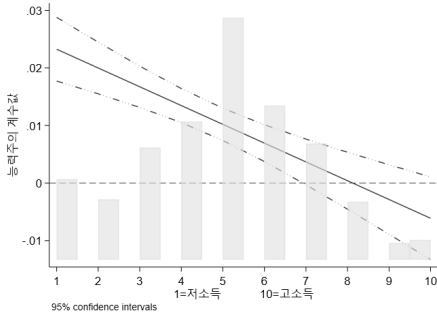
<표 2>는 능력주의, 소득, 가계재정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이다. 모델1부터 모델3은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한 다층모형분석 결과이며, 모델4부터 모델6은 국가별, 각 연도 별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한 회귀분석 값을 보여준다. 두 분석모델의 결과값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모델1부터 모델3을 중심으로 결과값을 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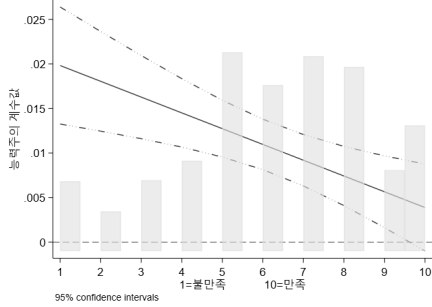
먼저 모델1은 다른 통제변수 없이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만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모델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가설 I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과 ‘가계재정 만족도’의 계수값을 살펴보면 소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가계재정에 만족할수록 정부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위의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가계재정 만족도 변수를 제외할 경우 소득계수는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한다. 이는 소득의 영향력의 상당부분을 가계재정 만족도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델2는 소득수준과 더불어 가계재정 만족도를 고려해야 각 시민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보다 엄밀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설 II와 가설 III을 검증하기 위해서 능력주의 변수와 소득, 가계재정 만족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델3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능력주의’와 ‘소득’의 상호작용항, 그리고 ‘능력주의와 ‘가계재정 만족도’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음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이전의 모델2과 모델3와 비교해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경우 능력주의 변수의 계수 값의 크기가 커졌다. 이를 종합해서 해석하면 곧 소득이 증가할수록, 혹은 가계재정에 만족할수록 능력주의가 정부신뢰에 주는 효과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능력주의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상은 가장 소득이 낮거나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소득수준에 따른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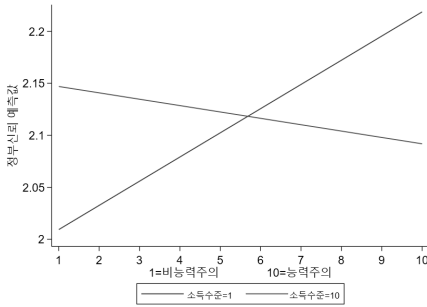
〈그림 3〉 가계재정 만족도에 따른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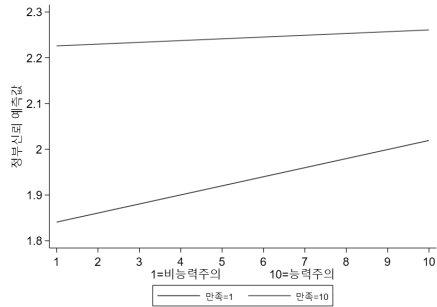
단순한 계수값의 수치만으로는 모델3의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쉽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능력주의 계수값의 한계효과를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모델3의 ‘능력주의’에 대한 ‘소득수준’ 그리고 ‘가계재정 만족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평균한계효과추정치(Average Marginal Effect)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그림 2>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이 적은 시민들이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 소득이 많은 시민들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고소득층의 경우(소득수준 7 이상) 능력주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능력주의에서 제시하는 체제 정당화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층은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부분 감소했지만, 저소득층은 여전히 노력을 통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능력주의에 기반한 사회체제가 유지될 때, 노력과 능력에 기반해 사회 경제적 성공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정부신뢰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을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계의 재정상태에

불만족스러운 시민들 중에서 능력주의를 믿을수록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해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우(가계재정 만족도=10) 능력주의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체제 정당화 경향이 고소득층과 재정에 만족하는 시민들보다 저소득층 그리고 가계재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 소득수준에 따른
능력주의 예측값



〈그림 5〉 가계재정 만족도에 따른
능력주의 예측값



추가적으로 모델3을 토대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의 양 극단(1과 10)에 놓인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능력주의에 따른 정부신뢰 예측값을 계산하였다. <그림 4>과 <그림 5>는 정부신뢰 예측값을 기준으로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에 따라서 능력주의와 정부신뢰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4>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시민들은(소득수준=1) 소득수준이 높은 시민들(소득수준=10)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낮지만, 능력주의를 신뢰할수록(능력주의 점수 6 이상) 소득이 높은 시민들보다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에 따르면 가계재정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가장 만족하는 시민들에 비해 능력주의를 가치관으로 삼을수록 정부신뢰의 상승폭이 더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계재정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만족하는 시민들보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의 체제 정당화 효과는 가계재정 만족도보다 소득수준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시민들이 능력주의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순전히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도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기성정치체제를 신뢰하게 된다. 하지만 가계재정에 대한 만족도는 체제정당화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가계재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시민들은 이미 이 요소로 인해 기존체제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계 재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들은 본인의 노력 대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불만과 불신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계재정 만족도가 높은 시민들에 비해서 낮다면, 신뢰의 격차는 능력주의의 효과를 통해서도 메워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본 논문의 경험적 결과는 가설 II를 지지하며, 가설 III은 제한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개인적 수준에서 통제변수들의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정부신뢰가 하락하며,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정치신뢰가 증가하였다. 반면 이주민보다 자국민을 취업시장에서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정부신뢰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보수적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부를 신뢰하였다. 결혼-동거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학력수준(대학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들이 개인의 능력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학력수준과 실무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실제 업무능력을 별개의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인 국가별 로그 GDP와 Gini 계수 그리고 실업률은 다층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층모형분석을 사용한 결과, 상당 부분 국가수준의

변화가 다층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표 3〉 행정부신뢰와 의회신뢰 분석

	(모델7) 행정부 신뢰	(모델8) 행정부 신뢰	(모델9) 의회 신뢰	(모델10) 의회 신뢰
고정효과				
개인수준				
능력주의	0.0157*** (0.00166)	0.0417*** (0.00480)	0.00676*** (0.00155)	0.0340*** (0.00451)
소득수준	-0.00549* (0.00234)	0.0167** (0.00547)	-0.000228 (0.00219)	0.0206*** (0.00512)
능력주의*소득수준		-0.00338*** (0.000750)		-0.00317*** (0.000703)
가계재정 만족도	0.0364*** (0.00207)	0.0465*** (0.00474)	0.0298*** (0.00194)	0.0422*** (0.00444)
능력주의*가계재정 만족도		-0.00158* (0.000655)		-0.00193** (0.000614)
상수	2.437 (1.372)	2.267 (1.369)	2.054 (1.099)	1.88 (1.098)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				
	0.607 (0.005)	0.606 (0.005)	0.531 (0.004)	0.53 (0.004)
국가수준 분산				
	0.089 (0.026)	0.088 (0.026)	0.057 (0.016)	0.056 (0.016)
Prob > chi2	0.00	0.00	0.00	0.00
로그우도값	-37097.48	-37079.064	-34818.234	-34796.359
개인수준 관측값	31,672	31,672	31,530	31,530
집단수준 관측값	24	24	24	24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또한 제도로서의 정부를 보다 엄밀하고 강건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정치신뢰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부신뢰 그리고 의회신뢰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두

고 분석하였다. <표 3>은 다층모형분석에 따른 계수값을 보여준다. 모델2와 모델3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공간상의 제약으로 통제변수는 <표 3>에서 생략하였다. 모델7과 모델8은 행정부신뢰를 종속 변수로, 모델9와 모델10은 의회신뢰를 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먼저 능력주의의 계수값이 행정부신뢰의 경우에 더 높았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에 따른 체제 정당화 효과는 행정부 신뢰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수의 방향성은 모두 <표 2>의 모델2와 모델3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능력주의에 의한 체제 정당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각 국가기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Polity V 민주주의 기준 적용

	(모델11) Polity V 모형	(모델12) Polity V 모형
고정효과		
개인수준		
능력주의	0.00882*** (0.00128)	0.0280*** (0.00369)
소득수준	-0.00436* (0.00185)	0.0133** (0.00423)
능력주의*소득수준		-0.00269*** (0.000578)
가계재정 만족도	0.0329*** (0.00163)	0.0396*** (0.00364)
능력주의*가계재정 만족도		-0.00102* (0.000495)
상수	1.963 (1.076)	1.837 (1.074)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	0.469	0.469

	(0.003)	(0.003)
국가수준 분산	0.069	0.068
	(0.017)	(0.018)
Prob > chi2	0.00	0.00
로그우도값	-39449.092	-39431.703
개인수준 관측값	37,836	37,836
집단수준 관측값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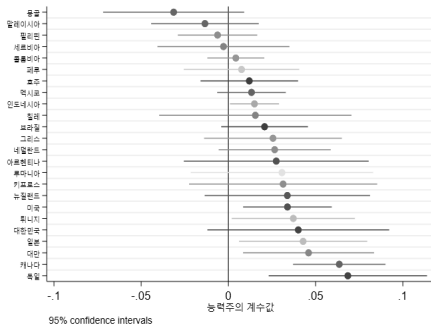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추가적인 강건성 검증을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보았다. Polity V에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Polity V에 의하면 총 35개 국가가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정치이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지 않은 5개 국가를 제외하고 30개 국가만을 고려하였다.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국가는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그리고 케냐이다. 앞선 모델2와 모델3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통제변수는 마찬가지로 <표 4>에서는 생략하였다. <표 4>의 결과를 통해 능력주의와 소득수준 그리고 가계재정 만족도 모두 계수의 방향성은 모델2와 모델3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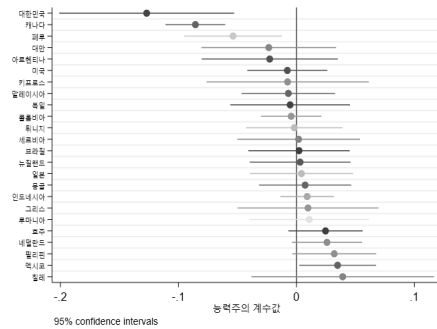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검증하고자 한 가설 중 소득효과가 가계재정 만족도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된 개별국가 수준에서 하위소득과 상위소득의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사이의 회귀계수 값을 계산했다. 국가 수준의 통제변수는 제외하고 모델3과 동일한 변수를 사용해서 국가별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그림 6>은 하위소득(소득수준=1)의 능력주의 계수값을 정리하였으며, <그림 7>은 상위소득(소득수준=10)의 능력주의 계수값을 정리하였다. <그림 6>에서는 대만,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튀니지 등의 저소득층들이 능력주의를 강하게 믿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소득층들은 능력주의 가치관이

강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그림 7>의 상위소득의 결과값은 멕시코만이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은 시민들이 능력주의 태도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림 2>의 결론과 일치한다).

<그림 6> 국가별 하위소득의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그림 7> 국가별 상위소득의
능력주의와 정부신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정부신뢰의 상승을 유도하지만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조사 시기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까지

- 4) <그림 6>과 <그림 7>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국가가 적은 이유는 소득 구간이 양극단에 위치한 사례 수가 적기 때문이다. 조사에서 분석한 24개 국가에서 저소득층(소득수준=1)의 평균 비중은 8.4%였으며, 고소득층(소득수준=10)의 평균 비중은 2.3%였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양극단에 놓인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16개 국가에 달했다.

관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부정부패 논란과 탄핵사태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의 저소득층의 경우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드러난 각종 논란과 2017년 말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각종 비리와 특혜 의혹으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가 과연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적합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배경으로 능력주의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수 있다. 즉, 논문의 가설과 일치하는 경향성은 보여주지만 당시의 상황적 맥락으로 인해 능력주의의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들의 경우에는 정부 당파성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계로 인하여 정부신뢰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당시 적폐청산, 재벌개혁, 그리고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여 사회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고소득층은 이러한 정부의 개입정책에 경계를 하고 이를 선호하지 않아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좌파정부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믿음은 고소득자들이 정부를 불신하도록 만들고 저소득층들은 정부를 신뢰하도록 만드는가? DPI 자료에서 조사기간 당시 정권의 당파성이 좌파로 분류되었던 그리스, 뉴질랜드, 독일, 필리핀, 캐나다를 살펴보면 캐나다를 제외하면 고소득층들에서 능력주의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서도 정부의 이념성향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림 6>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캐나다, 독일과 같은 좌파 정권이든, 미국과 대만 등과 같은 우파 정권이든 상관없이 저소득층들은 능력주의를 강하게 믿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능력주의의 정부신뢰 효과가 각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 당파성보다는 설문 조사 당시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

VI. 결론

본 논문은 능력주의와 정치신뢰 사이의 관계를 체제정당화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모든 경험적 모델에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주의 가치를 믿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득수준과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조절요인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는데, 이는 저소득층인 경우와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체제 정당화의 효과가 높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의 효과는 소득수준과 가계재정 만족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이 적은 시민들은 소득이 높은 시민들보다 능력주의 가치관을 신뢰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은 시민들의 경우 능력주의 가치관의 효과가 사라졌다. 가계재정 만족도도 위와 유사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가계재정상태에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이 그렇지 않은 시민과 비교해 능력주의 가치관을 신뢰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졌다. 하지만 재정상태에 불만족하는 시민들은 능력주의를 아무리 강하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상태에 만족하는 이들보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정상태에 불만족하는 이들은 이미 자신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정당화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능력주의는 체제 정당화를 이끌어내며, 주로 저소득층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능력주의가 야기하는 체제 정당화하는 주로 사회적 하위계층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능력주의가 체제 정당화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동기이며 경제적 하위계층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받

견했다. 이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요구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기성체제의 엘리트들이 여전히 노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킨다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은 능력주의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오히려 기성체제를 옹호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논문의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논문에서 사용한 능력주의에 대한 변수 설정에 한계가 있다. 사용한 조사자료의 한계로 능력주의를 단지 성공의 배경이 개인의 노력인지, 혹은 배경과 운인지만을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이 경우 성공의 배경이 노력 때문이라고 믿는 시민들의 존재를 과대 추정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성공한 시민이 자신의 성공의 상당 부분이 본인의 배경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노력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항을 사용해서 능력주의의 가치관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는 노력과 재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능력주의 지표에 대한 보다 엄밀한 조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보상에 동의 여부, 재능 있는 시민의 중요 관직 진출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능력주의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능력주의자들의 평균값이 과반 이하로 나타난 국가와 능력주의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가 논문의 결론과 다르게 나타난 국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세르비아와 대한민국과 같이 능력주의자들의 평균값이 과반 이하인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성공이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저소득층들이 능력주의를 믿는다고 해서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저소득층들이 새롭게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밝혀진 정부와 정치 엘리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경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개별국가 차원에서 능력주의와 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을 파악하여 논문의 결과가 왜 특정 국가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긴 시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특정 정부에 대한 지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이념성향을 고려하였고 다층분석을 진행하였지만 국가별 능력주의의 정부신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욱 긴 시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기별로 다른 정부에 대한 지지를 통제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면 보다 강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태심. 2020. “공정한 불평등?: 체제 정당화와 재분배 선호.” 『평화연구』 28집 1호, 129-167.
- 박범섭·신정섭. 2021. “한국, 일본 대만에서 시민의 코로나 19 정부 대응 평가가 정부신뢰, 민주주의 만족도,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집 3호, 131-166.
- 정태석. 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호, 12-46.
- Alesina, Alberto, and George-Marios Angeletos. 2005. “Fairne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5(4): 960-980.
- Banwart, Mary Christine. 2007. “Gender and Young Voters in 2004: The Influence of Perceived Knowledge and Interes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9): 1152-1168.
- Bartels, Larry M. 2008.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ncel, Lucas,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and Gabriel Zucman. 2021.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Paris: World Inequality Lab.
- Citrin, Jack, and Donald Philip Green.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 431-453.
- Citrin, Jack, and Samantha Luks. 2001. “Political Trust Revisited: Déjà Vu All Over Again?” in Chong, Dennis.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9-2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Karen S., and Karen A. Hegtvedt. 1983. “Distributive Justice, Equity, and Eq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217-241.
- Diamond, Patrick. 2012. “From Fatalism to Fraternity: Governing Purpose and the Good Society.” in Cramme, Olaf, and Patrick Diamond. eds. *After the Third*

- Way: The Future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1-28. London: I.B.Tauris.
- Donnelly, Michael J., and Grigore Pop-Eleches. 2018. "Income Measures in Cross-National Surveys: Problems and Solutions."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6(2): 355-363.
- Easton, Davi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Y: John Wiley.
- Freund, Caroline, and Sarah Oliver. 2016. "The Origins of the Superrich: the Billionaire Characteristics Databas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16(1): 1-30.
- Goubin, Silke, and Marc Hooghe. 2020. "The Effect of Inequality on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and Political Trust in Europe." *Social Justice Research* 33(2): 219-247.
- Haerpfer, Christian W., Ronald Inglehart, Alejandro Moreno, Christian Welzel, Kseniya Kizilova, Jaime Diez-Medrano, Marta Lagos, Pippa Norris, Eduard Ponarin, and Bi Puranen. 2022.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2) Cross-National Data-Set. Version: 4.0.0."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doi.org/10.14281/18241.18.
- Hetherington, Marc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Marc J., and Jason A. Husser. 2012. "How Trust Matters: The Changing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2): 312-325.
- Hibbs, Douglas A.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Macroeconomics and Electoral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oby, William G. 2000. "Issue Framing and Public Opinion on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4): 750-767.
- Jost, John T. 2020. *A Theory of System Justifi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Jost, John T., Mahzarin R. Banaji, and Brian A. Nosek. 2004. "A Decade of System

-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 Jost, John T., Brett W. Pelham, Oliver Sheldon, and Bilian Ni Sullivan.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3-36.
- Jost, John T., and Jojanneke Van der Toorn. 2012. “System Justification Theory.” in Van Lange, Paul A. M., E. Tory Higgins, and Arie W. Kruglanski.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ume 2*. 313-343. California: SAGE Publishing.
- Kiewiet, D. Roderick. 1981. “Policy-Oriented Voting in Response to Economic Issu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2): 448-459.
- Kim, Chang-Hee, and Yong-Beom Choi. 2017. “How Meritocracy is Defined Today?: Contemporary Aspects of Meritocracy.” *Economics & Sociology* 10(1): 112-121.
- Kluegel, James R., and Eliot R. Smith. 2017.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London: Routledge.
- Larsen, Christian Albrekt. 2016. “How Three Narratives of Modernity Justify Economic Inequality.” *Acta Sociologica* 59(2): 93-111.
- Lawrence, Robert Z. 1997. “Is it Really the Economy, Stupid” Nye, Joseph S.,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111-13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edgerwood, Alison, Anesu N. Mandisodza, John T. Jost, and Michelle J. Pohl. 2011. “Working for the System: Motivated Defense of Meritocratic Beliefs.” *Social Cognition* 29(3): 322-340.
- Levi, Margaret, and Laura Stoker.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457-507.
- Lewis-Beck, Michael S.,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183-219.
- Lind, E. Allan, and Tom R. Tyler. 1988. *The Social Psychology of Procedural Justice*. New York: Plenum Press.
- Linde, Jonas, and Gissur Ó. Erlingsson. 2013. “The Eroding Effect of Corruption on System Support in Sweden.” *Governance* 26(4): 585-603.
- Lipsey, David. 2014. “The Meretriciousness of Meritocracy.” *The Political Quarterly* 85(1): 37-42.
- Marien, Sofie, and Hannah Werner. 2019. “Fair Treatment, Fair 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Treatment Perceptions, Political Trust and Compliant and Cooperative Attitudes Cross-Nationall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58(1): 72-95.
- Martin, Gregory, Darryl Dymock, Stephen Billet, and Greer Johnson. 2014. “In the Name of Meritocracy: Managers' Perceptions of Policies and Practices for Training Older Workers.” *Ageing and Society* 34(6): 992-1018.
-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1845. *The German Ideology*.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5/german-ideology/ch01a.htm>
- McCoy, Shannon K., and Brenda Major. 2007. “Priming Meritocracy and the Psychological Justification of Inequ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3): 341-351.
- McLaren, Lauren M. 2010. “Cause for Concern?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Political Trust.” *Policy Network Paper* www.policy-network.net/publications/3889/Cause-for-concern
- Mijs, Jonathan JB. 2021. “The Paradox of Inequality: Income Inequality and Belief in Meritocracy Go Hand in Hand.” *Socio-Economic Review* 19(3): 7-35.
- Miller, Arthur, and Ola Listhaug. 1999. “Political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Trust.” in Norris, Pippa.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204-2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ewby, Howard. 1977. *The Deferential Worker*. London: Allen Lane.
- Newman, Benjamin J., Christopher D. Johnston, and Patrick L. Lown. 2015. "False Consciousness or Class Awareness? Local Income Inequality, Personal Economic Position, and Belief in American Meritocrac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2): 326-340.
- Nieuwebeerta, Paul. 1996.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in Postwar Societies: Traditional Class Voting in Twenty Countries, 1945-1990." *Acta Sociologica* 39(4): 345-383.
- Orren, Gary. 1997. "Fall from Grace: The Public's Loss of Faith in Government." in Nye, Joseph S.,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77-10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nayotakis, Costas. 2014. "Capitalism, Meritocracy, and Social Stratification: A Radical Reformulation of the Davis-Moore Thesi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73(1): 126-150.
- Park, Crystal L., and Susan Folkman.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 Petring, A., Jochen Dahm, Tobias Gombert, Christian Krell, Diana Ognyanova, Knut Lambertin, Eva Flecken, Marius R. Busemeyer, and Thomas Rixen. 2012. *Welfare State and Social Democracy*. Bonn: Friedrich-Ebert-Stiftung.
- Reynolds, Jeremy, and He Xian. 2014. "Perceptions of Meritocracy in the Land of Opportunit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36: 121-137.
- Rudolph, Thomas J., and Jillian Evans.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Schnaudt, Christian, Caroline Hahn, and Elias Heppner. 2021. "Distributive and Procedure Justice and Political Trust in Europe." *Frontiers in Political Science* <https://doi.org/10.3389/fpos.2021.6422> 32.
- Shayo, Moses. 2009. "A Model of Social Identity with an Application to Political

- Economy: Nation, Class, and Redistribu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3(2): 147-174.
- Solt, Frederick. 2011. “Diversionary Nationalism: Economic Inequality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Pride.” *The Journal of Politics* 73(3): 821-830.
- Solt, Frederick. 2020. “Measuring Income Inequality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cial Science Quarterly* 101(3): 1183-1199. SWIID Version 9.3.
- Starmans, Christina, Mark Sheskin, and Paul Bloom. 2017. “Why People Prefer Unequal Societies.” *Nature Human Behaviour* 1(4): 1-7.
- Steenbergen, Marco R., and Bradford S. Jones. 2002. “Modeling Multilevel Data Structur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1): 218-237.
- Van der Toorn, Jozanneke, Matthew Feinberg, John T. Jost, Aaron C. Kay, Tom R. Tyler, Robb Willer, and Caroline Wilmuth. 2015. “A Sense of Powerlessness Fosters System Justification: Implications for the Legitimation of Authority, Hierarchy, and Government.” *Political Psychology* 36(1): 93-110.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You, Jong-Sung. 2005. *Corruption and inequality as correlates of social trust: Fairness matters more than similarity*. Cambridge: Hauser Center for Nonprofit Organizations.
- Young, Michael. 1958.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870-2033*. London: Thames and Hubson.
- Zmerli, Sonja, and Juan Carlos Castillo. 2015. “Income inequality, distributive fairness and political trust in Latin America.” *Social Science Research* 52: 179-192.

Meritocracy, System Justification, and Governmental Confidence

Oh, Ha Seok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an, Sung Min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ilding on system justification theor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meritocratic belief on governmental confidence using the 7th wave of the World Value Survey (WVS). System justification theory suggests that citizens become compliant with the current political systems if they believe their systems are justifiable. Given that meritocratic belief induces individuals to have ideas that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re natural outcomes of individual efforts rather than sociological conditions, it can function as an ideology for system justific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dividuals with a strong meritocratic belief are more likely to have greater confidence in government than others. Additionally, we find that this effect becomes stronger for low-income classes and those with great financial dissatisfac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meritocratic ideology induces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effect of meritocracy are varied by citizens' economic situations.

Key Words | System Justification, Meritocracy, Fairness, and Government Confidence

부록

〈부록 1〉 주요 변수 소개

구분	변수 명	사용 설문	변수 값	측정
종속 변수	정부신뢰	행정부신뢰와 의회신뢰의 평균값 도출		
	행정부 신뢰	Q71: 정부신뢰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매우 신뢰한다.
	의회신뢰	Q73: 의회신뢰	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	매우 신뢰한다.
신뢰도(Cronbach alpha)			0.825	
독립 변수	능력주의	Q110: 성공: 근면(hard work) vs 운(luck)	1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과 배경이 좋아야 성공한다.
			10	열심히 일하면 결국 잘 살게 된다.
	소득수준	Q288: 가구 소득수준	1	하위계층
			10	상위계층
	가계재정 만족도	Q50: 가계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	1	대단히 불만족한다
			10	매우 만족한다
	통제 변수	정치관심	Q199: 정치에 대한 관심도	1
4				매우 관심이 있다
부정부패 인식		Q112: 자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1	부정부패 없음
			10	만연한 부정부패
이주민 문제		Q34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더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1	전적으로 반대
			5	전적으로 찬성
보수		Q240: 진보와 보수	1	진보
			10	보수
여성		Q260: 성별	0	남성
			1	여성
연령대		Q261: 연령 연령대로 채코딩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구분	변수 명	사용 설문	변수 값	측정
	대학교 이상	Q275: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재코딩	0	대학교 졸업 미만
			1	학사, 석사, 박사
	결혼-동거	Q273: 결혼상태 재코딩	0	미혼, 별거, 이혼, 사별
			1	동거, 결혼
	로그 GDP	각 국가별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기 GDP의 자연로그값 (GDP (current US\$))		
	실업률	각 국가별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기의 실업률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Gini 계수	각 국가별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기 혹은 가까운 시기의 Gini 계수 (Solt 2020)		
	연도 더미변수	세계가치관조사의 조사기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모든 모델에 포함		
	국가 더미변수	고정 효과모형에서 조사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을 각각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통제변수로 포함		

〈부록 2〉 부록 1에 사용된 세계가치관조사 설문문항 원문 및 원자료 값

구분	변수 명	사용 설문	변수 값	측정	
종속 변수	행정부 신뢰	Q71: Confidence: The Government	1	A great deal	
			4	None at all	
	의회 신뢰	Q73: Confidence: The Parliament	1	A great deal	
			4	None at all	
독립 변수	능력 주의	Q110: Success: hard work vs luck	1	In the long run, hard work usually brings a better life	
			10	Hard work doesn't generally bring success – it's more a matter of luck and connections	
	소득 수준	Q288: Scale of incomes	1	Lower step	
			10	Tenth step	
	가계 재정 만족도	Q50: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of household	1	Dissatisfied	
			10	Satisfied	
	통계 변수	정치 관심	Q199: Interest in politics	1	Very interested
				4	Not at all interested
부정 부패 인식		Q112: Perceptions of corruption in the country	1	There is no corruption in this country	
			10	There is abundant corruption in this country	
이주민 문제		Q34: Employers should give priority to people than immigrants	1	Agree strongly	
			5	Disagree strongly	
보수		Q240: Left-right political scale	1	Left	
			10	Right	
여성		Q260: Sex	1	Male	
			2	Female	
연령대		Q261: Age	17	The lowest years old	
			103	The highest years old	

구분	변수명	사용 설문	변수값	측정
	대학교 이상	Q275: Highest educational level	0	Early childhood education
			1	Primary education
			2	Lower secondary education
			3	Upper secondary education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5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6	Bachelor or equivalent
			7	Master or equivalent
			8	Doctoral or equivalent
	결혼 동거	Q273: Marital status	1	Married
			2	Living together as married
			3	Divorced
			4	Separated
			5	Widowed
6			Single	

〈부록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명	관측치 ⁵⁾	평균/비율 (연령대)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부신뢰	37,083	2.144	0.81	1	4
행정부신뢰	37,625	2.23	0.92	1	4
입법부신뢰	37,304	2.06	0.85	1	4
능력주의	37,852	6.50	2.76	1	10
소득수준	37,064	4.89	2.15	1	10
가계재정 만족도	38,138	6.33	2.36	1	19
정치관심	38,078	2.37	0.95	1	4
부정부패 인식	37,745	7.68	2.34	1	10
이주민 문제	28,031	3.56	1.2	1	5
보수	33,832	5.55	2.36	1	10
여성	20,117 (여성) 18,310 (남성) 38,427 (총계)	0.52	0.5	0	1
연령대	8,144 (20대 이하) 7,517 (30대) 6,959 (40대) 6,391 (50대) 5,527 (60대) 3,788 (70대 이상)	21.25% 19.61% 18.16% 16.68% 14.42% 9.88%	1.63	1	6
대학교 이상	10,442 (학사 이상) 27,490 (학사 미만) 37,932 (총계)	0.28	0.45	0	1
결혼-동거	24,382 (결혼, 동거) 13,722 (미혼, 이별, 별거, 사별) 38,104 (총계)	0.64	0.48	0	1
로그 GDP	38,466	27.25	1.68	23.43783	30.60039
실업률	38,466	6.56	4.02	2.24	19.29
Gini계수	38,466	36.73	6.85	27.2	47.8

5) 연령대의 경우 각 연령대 별 관측치를 정리하였으며, 더미변수로 만든 여성, 대학교 이상, 결혼-동거의 경우 1에 해당하는 관측치와 0에 해당하는 관측치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부록 4〉 DPI(2020)의 정부이념⁶⁾

국가명	조사 연도	정부여당	정부 이념
그리스	2017	시리자(Syriza)	좌파
네덜란드	2022	자유민주국민당 (Volkspartij voor Vrijheid en Democratie)	좌파 (2020)
뉴질랜드	2020	뉴질랜드 노동당 (Labour Party)	좌파
대만	2019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우파
대한민국	2018	더불어민주당 (The Minjoo Party of Korea)	정보없음
독일	2018	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좌파
루마니아	2018	무소속	정보없음
말레이시아	2018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정보없음
멕시코	2018	제도혁명당 (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중도
몽골	2021	민주당 (Democratic Party)	정보없음 (2020)
미국	2017	공화당 (Republican Party)	우파
브라질	2018	민주운동당 (Partido do Movimento Democrático Brasileiro)	중도
세르비아	2017	세르비아 진보당 (Serbian Progressive Party)	조사되지 않음
아르헨티나	2017	캄비에모스 (Cambiemos)	우파

6) DPI의 데이터는 2020년도까지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조사된 네덜란드와 몽골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 국가는 2022년까지 집권정당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국가명	조사 연도	정부여당	정부 이념
인도네시아	2018	민주항쟁당 (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정보없음
일본	2019	자유민주당 (Liberal Democratic Party)	정보없음
칠레	2018	칠레여 가자 (Let's Go Chile)	정보없음
캐나다	2020	캐나다자유당 (Liberal Party of Canada)	좌파
콜롬비아	2018	민주중도당 Democratic Center	우파
키프로스	2019	민주집회당 (Democratic Rally)	우파
튀니지	2019	튀니지의 소리 (Call for Tunisia)	중도
페루	2018	변화를 위한 페루인 (Peruanos Por el Cambio)	중도
필리핀	2019	필리핀 민주당-인민의 힘 (Partido Demokratiko Pilipino-Lakas ng Bayan)	좌파
호주	2018	오스트레일리아 자유당 (Liberal Party of Australia)	우파

〈부록 5〉 DPI 정부이념 추가 모델

	정부이념 모형	정부이념 모형
고정효과		
개인수준		
능력주의	0.012*** (0.002)	0.040*** (0.005)
소득수준	0.005* (0.002)	0.030*** (0.006)
능력주의*소득수준		-0.004*** (0.001)
가계재정 만족도	0.033*** (0.002)	0.043*** (0.005)
능력주의*가계재정 만족도		-0.002* (0.001)
부정부패 인식	-0.093*** (0.002)	-0.093*** (0.002)
정치관심	0.079*** (0.005)	0.079*** (0.005)
이주민 문제	-0.029*** (0.004)	-0.028*** (0.004)
보수	0.017*** (0.002)	0.016*** (0.002)
여성	0.036*** (0.009)	0.035*** (0.009)
연령대	0.009** (0.003)	0.009** (0.003)
결혼-동거	0.013 (0.009)	0.013 (0.009)
대학이상	-0.002 (0.011)	-0.001 (0.011)

	정부이념 모형	정부이념 모형
국가수준		
로그 GDP	0.043 (0.044)	0.043 (0.044)
실업률	-0.004 (0.009)	-0.004 (0.009)
Gini 계수	-0.021 (0.013)	-0.021 (0.013)
정부이념	0.030 (0.070)	0.029 (0.070)
상수	1.199 (1.343)	1.031 (1.347)
임의효과		
개인수준 분산	0.424 (0.004)	0.423 (0.004)
국가수준 분산	0.035 (0.012)	0.035 (0.012)
Prob > ch	0.00	0.00
로그우도값	-21749.284	-21727.988
개인수준 관측값	21,925	21,925
집단수준 관측값	16	16

*** p<0.001, ** p<0.01, * p<0.05,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